

2026 01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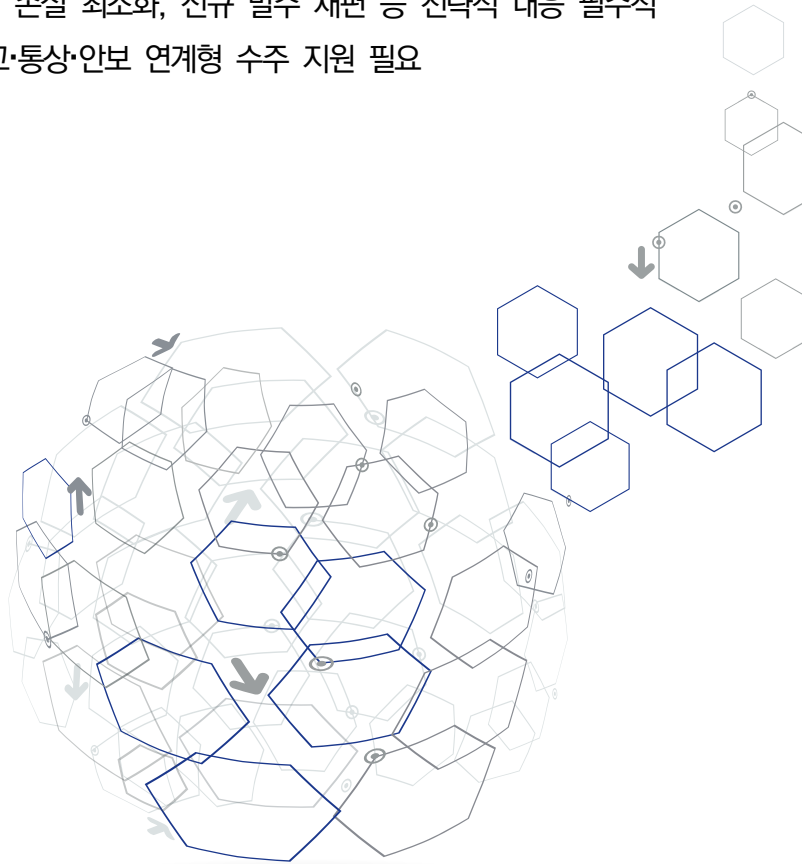
CERIK

하이라이트

5.14

중동 분쟁이 해외건설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전략

- 미국-이란 무력 충돌, 해외건설시장 복합적 위기 초래
- 비용 상승, 변동성 확대, 수주 구조 재편 예상
- 기존 사업 손실 최소화, 신규 발주 재편 등 전략적 대응 필수적
- 정부, 외교·통상·안보 연계형 수주 지원 필요



CERIK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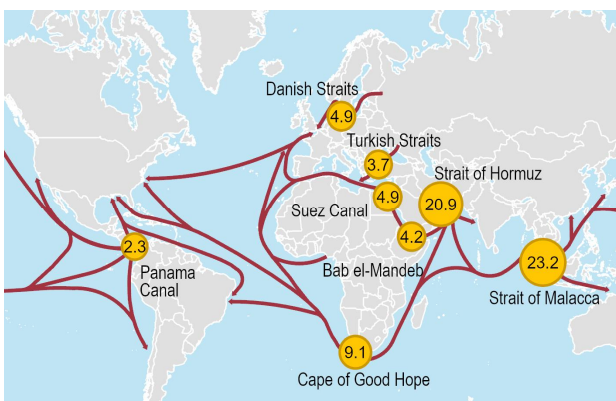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미국-이란 전쟁의 성격과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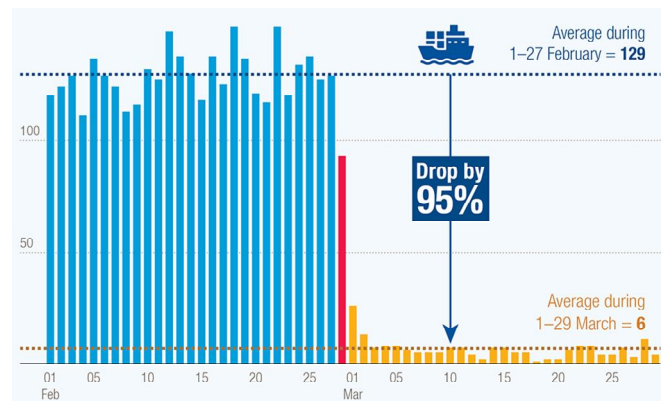
- 올해 초 발생한 미국과 이란 간의 무력 충돌은 글로벌 병목지점인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 리스크, 에너지 수급 불안, 해상운송 차질, 금융·보험 비용 상승, 제재 및 결제 리스크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작동하는 복합위기라는 점에서 해외건설기업이 직면한 사업환경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음.
 - 걸프전(1990), 이라크전(2003) 등 과거의 중동 분쟁이 영토의 점령이나 정권 교체가 중심이었다면, 이번 분쟁은 단순한 군사 충돌을 넘어 해상 병목 통제와 경제적 압박이 결합된 공급망 전쟁의 성격을 띠며, 호르무즈 해협 통행 중단은 결국 에너지, 시장, 해운, 글로벌 공급망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 호르무즈 해협은 전세계 해상 원유 교역의 약 4분의 1이 통과하는 전략적 병목지점으로 해당 구간의 불안정은 곧 글로벌 공급망 전반의 구조적 리스크로 확산되며(그림 1), 2026년 2월 평균 129척이었던 호르무즈 해협의 일일 통행량은 3월 한달간 평균 6척으로 감소함(그림 2).
 - 이는 해외건설시장 관점에서 유가의 일시적 등락뿐 아니라 기자재 반입 지연, 선박 확보 난항, 전쟁 위험 보험료 상승, 현장운영비와 금융비용 동시 증가 등 다양한 요인이 동시에 사업의 수익성을 압박하게 될 것임을 시사함. 유엔 무역개발 회의는 연료가격 급등뿐 아니라 교역 비용 상승, 성장 둔화, 개발도상국 금융 압박 확대 가능성을 함께 경고하였음.¹⁾

〈그림 1〉 거점별 해상 원유 수송량('25년 1Q)



단위 : 백만 배럴/일
출처 : 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2026).²⁾

〈그림 2〉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수 변화



단위 : 척
출처 : UNCTAD(2026).³⁾

- 해외건설시장 측면에서 이번 사태의 핵심은 '조속한 평시로의 복귀'가 아닌, 불완전한 휴전 가운데 항행 안전, 에너지 가격, 운송비, 보험료, 환율, 차입 스프레드가 장기간 높은 변동성을 유지하게 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사업 포트폴리오와 리스크 관리 체계를 새롭게 구성해야 한다는 것임.
 - 현재 미국의 대이란 거래 및 제재 규정⁴⁾은 이란으로의 수출·재수출, 금융 거래를 대부분 금지하므로 대이란 제재 리스크는 현지 프로젝트 수행 유무를 넘어 결제, 금융 주선, 제3국 경유 공급, 장비 반입 구조까지 함께 검토되어야 함.

1) UN Trade and Development (2026) Strait of Hormuz Disruptions: Implications for Global Trade and Development.

2) 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2026) World Oil Transit Chokepoints.

3) UN Trade and Development (2026) Strait of Hormuz Disruptions: Growth and Financial Implications.

4) ITSR, Iranian Transactions and Sanctions Regulations.

- 미국은 이란의 석유 운송, 그림자 금융, 우회 네트워크에 대한 추가 제재를 이어가고 있어 향후 해외건설 리스크는 현장 보안보다 거래 합법성, 은행 연결성, 보험 인수 가능성, 제3국 법인 활용 구조의 적법성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음.
 - 이와 같은 이유로 향후 중동 시장에서의 수주 경쟁력은 단순한 가격 경쟁력보다 조달의 안전성, 결제의 신뢰성, 신속한 공급망 및 금융구조 설계 역량에 의해 좌우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해외건설기업에 요구되는 역량이 공사수행 능력에서 '사업 연속성 확보 능력'으로 이동할 가능성을 시사함.
- ◎ 과거에도 중동 분쟁은 단순히 '중전 후 발주 재개'를 넘어 해상 안전의 취약성 노출, 재건사업의 정치화, 외교·안보 질서 변화에 따른 발주구조 재편을 동반했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 역시 일시적 충격으로 보기 어려움.
- 2019년 UAE 영해에서 4척의 유조선이 공격받은 사건은 호르무즈 인근 해역의 불안정이 실제 상업선박 운항과 보험 판단에 직결될 수 있음을 국제사회에 재확인시킨 바 있음.
 - 세계은행(World Bank)은 과거 이라크 재건 사례와 관련해 취약국의 재건에 있어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보안 불안, 국가 역량 약화, 제도 정합성 부족, 국제행위자 간 조정 문제를 지적하며 전후 재건은 단순한 건설도급 시장이 아니라 외교, 안보, 공여, 재정, 제도 개혁이 동시에 작동하는 복합 시장임을 시사하였음.⁵⁾
 - 따라서 이번 사태 이후 형성될 중동의 사업기회 역시 단순한 신규 EPC 발주 증가로 보기보다는 피해 시설 복구, 저장·출하 기능 보강, 우회 수송망 확충, 방호·감시체계 고도화, 공공서비스 복구를 결합한 패키지형 시장으로 전개될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음.

해외건설시장 관점에서 본 핵심 쟁점

- ◎ 미-이란 충돌은 특정 국가 진출 가능성 여부를 따지는 차원이 아니라, 건설기업이 직면한 본질적 화두는 중동 건설시장의 리스크 구조 자체가 재편되고 있다는 점임. 1965년 초도 진출 이후 1조 달러가 넘는 누적 수주의 절반 이상을 중동이 차지하는 우리나라 해외건설 수주 구조를 감안할 때 이는 산업 전반의 이슈임.
- 1990년 걸프전이나 2003년 이라크전 역시 석유 인프라와 항행 안전이 핵심 변수였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를 “공급망 전쟁”이라는 새로운 유형의 분쟁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음. 하지만, 호르무즈 통항이 실제로 임계점을 넘어 95% 수준의 통항량 감소를 기록한 사실은 과거 분쟁과 정도의 차이가 아닌 질적 차이를 보여줌.
 - 중요한 것은 이번 사태가 일시적 충격에 그치지 않고 건설기업의 사업환경을 구조적으로 변화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며, 따라서 분석의 출발점은 변화의 작동 경로와 기업의 통제 가능 영역을 구분해 내는 데 있어야 함.
- ◎ 이러한 관점에서 본 보고서에서는 다음 세 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함.
- 첫째, 이번 사태는 일시적 충격인가, 구조적 전환인가.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차질, 전쟁위험 보험시장의 재가격화, 중동 발주국의 재정전략 재편이 동시에 진행되는 현상이 단기 변동인지, 아니면 향후 중동시장의 표준 환경으로 자리잡을 변화인지를 판별하는 일이 우선 과제임.

5) World Bank Group(2019), The Reconstruction of Iraq after 2003: Learning from Its Successes and Failures.

- 둘째, 변화가 구조적이라면 그것은 어떤 경로로 건설기업의 수익구조를 압박할 수 있는지 살펴보아야 함. 에너지·자재 가격, 공급망과 물류, 금융비용, 인력 안전과 수급, 신규 발주 환경 등 다섯 갈래로 영향이 전달되는 양상을 구분해 이해할 필요가 있음.
- 셋째, 정책 대응의 영역과 기업 대응의 영역을 구분하기 위해 건설기업이 통제 가능한 변수와 통제 불가능한 변수를 구분할 필요가 있음. 유가, 환율, 호르무즈 통항 안전, 미국의 대이란 제재 같은 거시변수는 개별 기업이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지만, 계약 관리, 공급망 다변화, 금융 구조화, 발주처 관계 관리의 기업의 역량과 준비 수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



전쟁으로 인한 해외건설시장의 리스크 확산 구조

- ◎ 분쟁 발생 지역 및 인근 지역(쿠웨이트, UAE, 카타르,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요르단, 이란, 이스라엘)에서 79개 국내 기업이 총 275건의 사업(1,409억 달러)을 추진 중에 있음(26.4.6. 기준).⁶⁾
 - 국가별로는 쿠웨이트 24건, UAE 68건, 카타르 32건, 바레인 4건, 사우디아라비아 112건, 이라크 22건, 요르단 6건, 이란 6건, 이스라엘 1건임.
- ◎ 미국-이란 충돌의 파급 영향은 에너지 및 원자재 가격, 공급망, 금융, 인력 안전과 수급, 신규 발주 환경의 변화로 구분할 수 있음. 이러한 리스크는 서로 연계되어 해외건설 사업 수행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 ◎ (에너지 및 원자재 가격)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석유와 LNG 운송의 핵심 경로로 현재 통항 차질에 따른 유가 상승이 진행 중이며, 이는 건설 기자재 생산비, 운송비, 장비 운영비 등의 동반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음.
 - 호르무즈 해협으로 전 세계 원유 해상 무역의 약 27%, LNG 수출의 약 22%가 통과함. 우리나라의 경우, 단기 충격 시에는 전 산업의 평균 생산비가 4.2% 상승하며, 3개월 이상 지속 시에는 9.4% 상승할 것으로 추정됨.⁷⁾
 - 국제유가 상승은 △원유 정제 부산물인 아스팔트·역청류의 가격을 직접적으로 상승시키고, △원유·나프타를 원료로 하는 석유화학 제품(플라스틱, 파이프, 단열재)의 원가를 높이며, △에너지 투입이 큰 시멘트·철강 등 주요 건설자재의 생산비용을 끌어올림. 또한 △디젤 가격 상승은 건설장비 운영비와 해상육상 운송비도 상승시킴.
 - 특히 플랜트 분야는 자재비 비중이 높고, 자재 상당 부분이 철강, 화학제품이며, 해상운송 의존도도 크기 때문에, 에너지 가격 상승이 직접적인 공사비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것임.
- ◎ (공급망) 전쟁의 영향은 해상운송 중단, 항로 우회, 해상보험료 증가, 기자재 조달 지연 등으로 이어짐. 특히 플랜트 사업은 일부 핵심 기자재의 지연이 전체 공정으로 확대되는 구조이므로 공급망 지연의 영향이 큼.
 - 플랜트 사업은 터빈, 변압기 등 핵심 기자재의 제작 기간이 길고 대체 조달이 어려운 대형 물자를 조달하기 때문에, 해상 운송의 안정성은 사업 수행의 핵심 조건임. 운송 지연은 설치 지연, 시운전 지연, 지체상금으로 이어질 수 있음.

6) 건수 및 금액은 신규공사 및 미착공 공사도 포함. 이란의 경우 실질적으로 중단 상태이나 타절 통보 등이 없어 통계상으로 포함.

7) 빙현지(2026.3.19.), 미국-이란 충돌과 호르무즈 리스크: 공급망 시나리오 분석과 시사점, I-KIET, 산업연구원.

- 중동 해상운송의 차질은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항로 재편과 물류비 상승으로 확산되고 있음.⁸⁾ 또한, 페르시아만 전역에서 전쟁위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일부 보장이 중단되고 있음. 글로벌 해상보험료 산정 기준을 제공하는 영국 로이즈 시장협회는 페르시아만 전체를 고위험 지역으로 확대 지정하였으며, 이는 민간 보험시장이 감당하기 어려운 지정학 리스크를 보여줌.⁹⁾

◎ (금융) 지정학적 충돌은 국제 금융시장에서 위험회피 심리를 강화하고, 환율 변동성, 프로젝트 파이낸싱 금리 상승, 보증·보험료, 환헤지 비용 등을 상승시키고 있음. 이에 따라 해외건설 프로젝트의 수익성 악화와 금융조달 지연 가능성도 커짐.

- 삼일PwC경영연구원은 중동 현장 비중이 높은 건설·EPC 업종은 공기 지연에 따른 금융비용 증가 및 대금회수 불확실성 등에 노출되어 원가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분석함.¹⁰⁾
- 지정학적 위험은 금융비용 상승으로 전환됨. 금융기관은 프로젝트의 국가위험, 발주처 신용위험, 공사 중단 가능성, 송금 제한 등을 다시 평가하며, 이에 따라 보증 수수료, 보험료, 조달 금리, 대출 약정 조건이 영향받음. 그 결과 건설기업이 부담하는 입찰보증, 계약이행보증, 선수금환급보증, 하자보증 등 각종 보증 비용이 상승함.
- 또한 해외건설 프로젝트는 계약 통화와 조달 통화가 서로 다른 경우가 많아, 전쟁 국면에서 달러 강세, 신흥국 통화 약세, 원화 변동성 확대에 따라 환헤지 비용과 정산 리스크가 커짐.

◎ (인력 안전 및 수급) 중동 분쟁은 가장 먼저 현장 인력의 안전을 위협하며, 또한 제3국 인력 의존도가 매우 높은 중동 건설시장 특성상 외국인 노동력의 이탈 가능성도 커짐.

- 이라크, 사우디, 쿠웨이트, UAE, 카타르 등 GCC 전역에 국내 건설사가 참여하는 대형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며, 이들 현장은 한국 본사 인력, 제3국 인력, 현지 근로자, 협력업체 인력이 혼합된 대규모 인력으로 운영됨.
- 안보 상황이 악화되면 운영 측면에서는 인력 이동 제한, 출퇴근 통제, 현장 폐쇄, 대피계획 가동이 시작되며, 비용 측면에서는 안전 확보를 위한 숙소 보안, 경호, 의료지원, 위성통신, 보험료 등 추가 비용이 증가함.
- 특히 GCC 지역에는 약 3,500만 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은 건설, 가사, 보안, 청소 등 주요 노동집약 부문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¹¹⁾ 중동지역의 긴장이 고조되면 외국인 노동자의 유출이 증가하고,¹²⁾ 단순한 인력 부족을 넘어 숙련공 공백, 하도급 운영 차질, 인건비 상승, 생산성 저하가 나타날 수 있음.

◎ (신규 발주 환경) 공급망, 금융, 안전 리스크로 인해 단기적으로 신규 발주가 지연되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에너지 안보, 방호, 재건 분야의 인프라 투자가 확대될 전망이다.

8) 항로 우회는 시간과 비용을 동시에 증가시킴. AP News에 따르면, 미국-이란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사실상 제한되면서 기업들이 대체 항로를 확보하고 있으며, 파나마 운하의 경우 우회 수요가 급증하면서 운하 통과를 위한 추가비용 부담도 커짐. ; AP News(2026.4.25.), Businesses dole out up to \$4 million to cross Panama Canal during Strait of Hormuz chokehold.

9) Matt Strahan, Daniel Murphy(2026.4.9.), How war in the Middle East is turning governments into insurers of last resort, World Economic Forum.

10) 삼일PwC경영연구원(2026.3.), 미국-이란 군사 충돌에 따른 한국 경제 및 산업 영향 점검, Issue Brie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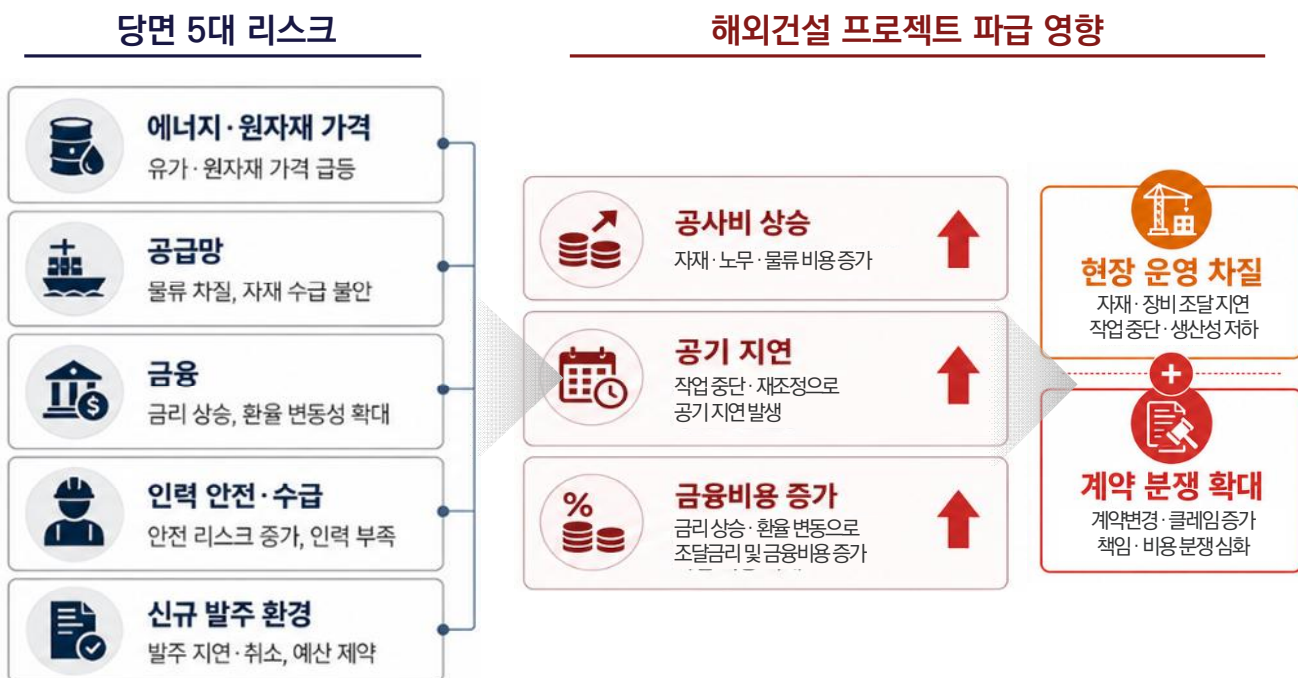
11) Aaljazeera(2026.3.9.), Where do the 35 million foreigners living in the GCC come from?.

12) Alhurra(2026.3.13.), Can Gulf Economies Hold Up if Foreign Workers Leave?.

- 해외시장 발주처는 공사비 상승, 금융비용 증가, 현장 안전 문제를 고려하여 입찰 일정을 연기하거나 사업 범위를 재조정하고 있음. 특히 금융시장 불안과 수요 위축에 민감한 민간투자사업, 부동산 개발, 관광·상업시설, 대규모 복합개발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음.¹³⁾
- 한편, GCC 산유국의 건설 프로젝트 우선순위가 재편되고 있으며, 전쟁 이후 발전·송배전망, 에너지 저장시설, 통신망, 수처리, 방공·방호시설, 전략 비축시설의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됨.
- 세계은행은 이번 충돌로 중동, 북아프리카,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지역의 성장 전망이 크게 악화되었으며, 특히 GCC와 이라크 경제가 큰 영향을 받고 있다고 평가함. 낮은 생산성, 민간부문 역동성 저하, 노동시장 문제를 겪고 있던 이 지역에 전쟁은 추가적인 부담이 되고 있음.¹⁴⁾
- 이러한 상황은 발주 방식의 변화를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됨. 중동 산유국은 이미 단순 도급(EPC)에서 투자개발형(PPP·BOT)으로 발주 방식을 전환하는 추세였으며, 앞으로 민간 자본 참여를 통해 발주국의 재정 부담을 분산하려는 경향이 더욱 확대될 것임.

- ◎ 에너지, 공급망, 금융, 인력 분야에서 현재 발생하고 있는 리스크는 공사비 상승, 공기 지연, 금융비용 증가를 야기하며, 결과적으로 현장 운영 차질과 계약 분쟁의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큼.
 -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기존 프로젝트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사업 수행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전쟁 이후 재편되는 시장 구조에 대응해 수주전략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함.

〈그림 3〉 미국-이란 전쟁이 해외건설 프로젝트에 미치는 영향



13) KAMCO Invest(2026.4.), GCC Project Market Update.

14) World Bank(2026.4.8.), Conflict Hits MENAAP Economies, Underscoring Need for Action to Boost Resilience, Create Jobs.

우리 기업의 당면 대응 과제

- ◎ 미국-이란 전쟁의 파급 영향은 지리적 위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므로, 우리 기업의 진출 시장을 중동 고위험권, 중동 안정권/GCC, 중동 외 권역으로 구분하여 대응 과제를 검토함.
 - (중동 고위험권) 이란,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 예멘 등 분쟁 불안이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지역으로, 현장 인력의 보호와 계약상의 권리 확보가 핵심 과제가 되는 지역임. 이들 지역에서는 신규 발주가 위축되고 있고, 이라크에서는 국내 건설기업의 장기 미수금¹⁵⁾이 누적되고 있음.
 - (중동 안정권/GCC) 사우디, UAE,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바레인 등이 포함된 지역으로, 미군기지 피격 등 간헐적 안보 위협은 있으나 민간 건설현장이 직접 타격될 가능성은 낮음. 다만, 공기 및 공사비의 관리와 향후 발주 유형 변화에 대한 준비가 필요함.
 - (중동 외 권역) 미국, 유럽, 동남아, 호주 등 글로벌 시장 전반을 포함하는 시장으로, 글로벌 공급망 및 금융시장 변동에 따른 간접 영향을 받는 지역임.
- ◎ 이러한 권역별 특성을 바탕으로 전쟁의 파급 영향, 기업의 핵심 리스크 및 대응 과제를 분석하면 다음 <표 1> 과 같음.

<표 1> 해외건설시장 권역별 파급 영향 및 기업 대응 과제

구분	중동 고위험권	중동 안정권/GCC	중동 외 권역
시장 특징	전쟁의 직접적 영향으로 현장 운영이 위협받는 지역 (이라크, 이란, 레바논)	전쟁의 직접 피해 가능성은 낮으나, 사업 리스크가 누적되는 지역 (사우디, UAE,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바레인)	직접적인 안전 위협은 없으나, 공급망과 금융비용 등 간접 영향을 받는 지역 (미국, 유럽, 동남아, 호주 등)
핵심 리스크	현장 안전 및 공사중단 리스크	공사비 상승 및 공기 지연 리스크	공급망 차질 및 금융비용 상승 리스크
대응 과제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수 인력 중심 운영, 비상대피계획 가동 ▪ 현지 보안 조직, 재외공관, 발주처와 비상연락체계 구축 ▪ 항공 의존 물류 비상계획, 핵심 기자재 사전 비축 ▪ 사업 철수 및 재개 기준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일 공정 모니터링 강화 ▪ 공정 및 자재 납기 점검 ▪ 대체 항로·항만 확보 ▪ 보안 비용, 전쟁보험료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자재·운송비 분석 ▪ 대체 공급처 확보, 조달망 다변화
	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가항력 통지 ▪ 철수 및 중단 사유 증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행 사업의 공기 연장과 가격 조정 협의 ▪ 공기 지연 및 비용 증가의 증빙 자료 축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입찰 단가 재산정 ▪ 입찰단계에서 가격조정 조항 등 변동위험 분담 협의
	재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수금 회수 준비 (외교적 지원 요청) ▪ 전쟁, 송금 제한 등 비상위험에 대한 보험 보장 범위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율 변동 대응방안 점검 ▪ 원자재 가격변동 대응방안 점검 ▪ 프로젝트 금융비용 부담 완화 방안 검토 	

15)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대규모 건설공사를 하고 1년 이상 대금을 받지 못한 장기 미수금은 2025년 6월 말 기준, 4억9천492만 달러로 파악됨. 이 중 3분의 2가량인 3억439만 달러가 중동과 인근 지역에서 발생했음. 이란에서 발생한 미수금은 3천339만 달러가 넘으며, 약성 미수금 중 1천만 달러 이상의 사업은 대부분이 이라크, 이란 등 중동지역 사업인 것으로 조사됨. ; 연합뉴스(2026.3.11.), '중동 건설공사 장기미수금 5천억...이종욱 "정부 차원 대응 필요"'

- ◎ (중동 고위험권) 이번 전쟁의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시장으로, 단기적으로는 인력과 자산의 보전 및 계약 상 권리 확보, 중장기적으로는 재건시장 진출 기반 구축이 필요한 지역임.
 - (단기 대응 과제) 기업은 현장별 위험평가를 강화하고, 비상대피 계획과 필수 인력 중심의 운영체계를 구축해야 함. 공사 중단이나 지연이 발생할 경우 즉시 발주처에 불가항력 통지를 발송하고, 현장 접근 제한, 항공편 취소, 물류 차질, 인력 철수 사유에 대한 증빙자료를 일일 단위로 축적해야 함. 이 자료는 향후 계약 해지 분쟁에서 핵심 근거가 됨.
 - (중장기 대응 과제) 제재 완화나 정권 변동 같은 외부 변수가 발생하는 시점에 재건시장으로 빠르게 진입할 수 있는 네트 워크를 미리 구축할 필요가 있음. 사업 수행 측면에서는 속도, 안전, 품질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모듈러 공법의 활용 을 고려하고, 자금조달 측면에서는 양국 정부의 금융협력을 기반으로 한 재건사업 모델을 준비해야 함.

- ◎ (중동 안정권/GCC) 우리나라 해외건설시장의 핵심 지역으로 전쟁의 영향이 누적되며 공사비 상승 및 공기 지 연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음.
 - (단기 대응 과제) 에너지원자재 가격, 공급망, 금융비용의 변동성이 프로젝트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해야 함. 핵심 기자재의 납기와 물류 운송 경로를 점검하고, 공기 지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기 연장 및 가격조정 가능성을 발주처와 협의해야 함.
 - (중장기 대응 과제) 이번 전쟁으로 중동시장의 발주 우선순위와 발주 방식이 변화할 것으로 예상됨. 중장기적으로 중요도 가 커질 분야를 중심으로 수주전략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 ◎ (중동 외 권역) 전쟁의 직접적 영향은 없으나, 에너지·원자재 가격 상승, 해상운송비 증가, 환율 변동, 금리 상 승으로 프로젝트의 수익성이 영향을 받는 지역임.
 - (단기 대응 과제) 공급망 지연에 대비하여 원자재·운송비의 변동을 분석하고, 대체 공급처를 확보해야 함. 신규 입찰에서 는 유가와 운송비 상승분, 금융비용, 환위험 관리 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고, 가격조정 조항 등 주요 변동 위험을 발주 처와 합리적으로 분담하는 방안을 협의할 필요가 있음.
 - (중장기 대응 과제) 특정 지역이나 단일 공급처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지역별 조달 허브와 장기 공급계약을 확보함으로 써 공급망을 다변화해야 함. 또한,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글로벌 불확실성에 대비해 입찰단가 산정 방식과 리스크 반영 기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 한편, 전쟁의 영향이 전 세계적으로 미치는 상황에서 해외건설협회에는 전쟁위험 운송보험, 보증 수수료, 운영 자금, 세금 납부 유예 등의 지원방안이 건의되고 있음.
 - (전쟁위험 운송보험 지원) 전쟁으로 기자재 운송 중 피해가 발생해도 현행 공적·민간 보험에서는 보상이 어렵기 때문에 전쟁 위험 적하보험 도입, 약관 정비, 보험료를 안정화, 추가 보험료 및 물류비 지원이 시급함.
 - (보증수수료 납부 유예 및 지원) 전쟁으로 공사가 지연되거나 중단될 경우 보증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수수료가 발생하므 로, 보증 갹신 수수료의 납부 유예나 이행보증 수수료의 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일시적 운영자금 확보를 위한 저금리 대출) 공기 지연과 비용 증가로 기업의 현금흐름이 악화되고 있어, 공사 수행을 위

한 긴급 운영자금의 저금리 지원이 필요함.

- (법률자문·기술컨설팅 비용 지원) 전쟁의 영향으로 발생한 공기 지연은 계약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므로, 이에 대비하기 위해 법률자문 및 기술컨설팅의 지원도 중요함.
- (세금 납부 유예 및 기타 비용 지원) 전쟁으로 입은 피해가 구체화 된 이후에는 법인세 납부 유예, 기성 미지급 보험 가입 지원 등 추가 지원도 검토되어야 함.



정부의 정책 대응: 단기 시장안정과 수주 지원

- ◎ 향후 중동 지역 해외건설시장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단기적인 충격 완화와 장래 수주 기반의 확보를 동시에 추구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함. 이번 사태는 특정 국가의 치안 불안이나 일회성 유가 변동에 그치지 않고 물류·금융·제재·안전 문제가 결합된 구조적 위험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임.
 - 따라서 정부는 금융·보증·보험 지원의 비상 대응체계화, 외교적·제도적 수주지원 강화, 실전형 자문 플랫폼 구축, 상설 민관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우리 건설기업의 사업 연속성을 확보하는 한편, 이를 향후 복구·재건시장 진입 기반으로 연결하는 전략적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 (정책금융, 보증, 보험 지원의 탄력적 운용) 정부는 이번 사태를 해상물류 차질과 전쟁위험 보험료 상승, 금융조달 부담 확대, 제재 및 결제 리스크가 동시에 중첩되는 복합 위기로 인식하고, 해외건설기업이 고위험 권역에서도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평시 기준의 금융·보증·보험 운용체계를 비상 대응형으로 전환해야 함.
 - 보험료 보증료, 환헤지 비용, 차입 스프레드가 동시에 상승하는 상황에서는 개별 기업의 자체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한시적 특별보증, 보험료 부담 완화, 보증심사 신속화, 보증한도 확대 등을 결합한 패키지형 지원이 필요함.
 - 기존 수행사업의 경우 공정 지연, 대금 회수 지연, 운송 차질, 현장 운영비 증가 등을 반영한 운영자금 및 브리지 금융 공급수단을 보완하여, 외부 충격이 사업 중단이나 채무불이행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직접 전쟁·제재 노출국, 호르무즈 의존 고발주국, 우회 물류 수혜국 등으로 시장 위험도를 재분류하고, 이에 따라 보증 인수 기준과 보험 지원 범위를 차등화함으로써 정책재원이 전략적으로 배분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국가 신용이나 사업성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운 전략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정책금융기관 공동지원, 주권 보완장치, 특별계정 운용 등 비상시 적용 가능한 보완수단을 사전에 설계할 필요가 있음.
- ◎ (외교, 통상, 안보 연계형 수주지원 강화) 중동 국가 대상의 해외수주 지원은 시장개척이나 고위급 세일즈 외교 차원을 넘어 외교·통상·안보 정보를 종합한 사업의 연속성을 지원하는 체계로 고도화할 필요가 있음.
 - 향후 중동 발주국의 투자 전략이 에너지 안보, 우회 물류, 전략 인프라 복원, 내수 안정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정부는 정상외교와 경제협력 채널을 활용하여 우리 기업이 재건·보강·대체 인프라 사업 정보를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특히 분쟁 당사국 및 인접국과의 사업은 공사 수행 자체보다 통항, 통관, 결제, 제재 예외, 인력 이동, 장비 반입 가능성

등 비군사적 변수에 의해 좌우될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재외공관과 통상당국, 안보 관련 부처, 유관 공공기관이 공동으로 현지 위험정보와 발주환경 변화를 통합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함.

- 또한 단기적으로는 현장 안전과 사업 지속을 지원하되, 중기적으로는 ODA, 정책금융, 다자개발은행 사업과 연계 가능한 복구·재건형 사업을 선제 발굴하는 이중 트랙의 수주지원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법률, 계약 자문 등 기업 지원 플랫폼 확충) 기업 지원은 일반적인 애로사항 접수나 상담 수준에서 확장하여 실제 입찰·계약·수행·철수·대금회수 단계에서 활용 가능한 실전형 지원 플랫폼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음.

- 이번 위기에서는 현장 안전관리 못지않게 제재 해석, 결제 경로의 적법성, 제3국 거래의 합법성, 불가항력 통지, 공기연장 및 비용보전 근거 확보가 중요하므로 법률·금융·회계·물류·컴플라이언스를 아우르는 통합 자문 체계 마련이 필요함.
- 입찰 단계에서는 가격조정 조항, 법령 및 제재 변경 조항, 운송 불능 및 결제 불능 시 공사 중단 조항, 지체상금 완화 및 면책 조항, 대체 결제은행 활용 조항 등을 사전에 점검하기 위한 표준 체크리스트와 권고안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수행 단계에서는 발주처의 재정상태 변화, 현지 은행의 결제 가능 여부, 선사 및 보험사의 인수 기준 변화, 철수 및 대체 이동 경로 등 사업 연속성에 직결되는 정보를 상시 제공하여 기업의 사전적 대응 역량 확보를 지원해야 함.
- 아울러 이러한 플랫폼은 법적 해석을 넘어 실제 계약 수정 협상, 클레임 대응, 지급 지연 대응, 공사 중단 판단까지 연결 되는 실행형 지원 수단으로 작동해야 함.

◎ (고위험 시장 대응 민관 협의체 운영) 정부는 복수 부처 및 개별 기업에 분산된 중동 고위험 시장 대응기능을 종합하여 위험정보 공유, 정책금융 연계, 외교 지원, 긴급 대응, 향후 재건사업 준비를 하나로 묶는 상설 민관 협의체를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이는 국가별 위험등급 재분류, 프로젝트별 애로사항 접수, 긴급 상황 발생 시 현장 인력의 보호 및 대체 이동 지원, 정책 금융 및 보험 연계, 발주처 투자동향 점검 기능을 연계하는 형태로 구성되어야 함.
- 또한 분쟁의 장기화 가능성을 감안하여, 직접 피해 복구 수요뿐 아니라 저장·출하 기능 보강, 우회 회랑 확충, 보안 강화, 운영 정상화 등 회복탄력성 사업을 사전에 발굴·촉적하는 기능도 함께 가져야 함.
- 정부와 공공기관, 해외건설협회, 정책금융기관, 기업이 동일한 상황 인식과 사업 우선순위를 공유할 수 있어야 단기 시장 안정과 중기 수주 준비가 분리되지 않으며, 위기 대응이 곧 향후 재건시장 진입 기반으로 이어질 수 있음.
- 결국 민관 협의체의 목적은 단기 위기관리 자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불확실성을 우리 기업의 향후 복구·재건시장 선점 기반으로 전환하는 데 두어야 함.



향후 재건시장 전망과 준비 전략

◎ 이란 본토와 전쟁으로 인한 물리적 피해가 확인된 GCC 등의 지역에서는 긴급 복구 및 중장기 재건 수요가 발생할 수 있음. 하지만, 전통적 의미에서의 재건보다 에너지·산업 인프라, 교통·물류, 도시 인프라 등의 회복 탄력성 강화를 위한 투자가 확대될 가능성이 큼.

- 이란의 경우 비록 정확한 피해 평가(Damage Assessment)가 이뤄지기 전이지만 에너지·전력 및 정유·가스처리 분야는 재건 수요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됨. 이란은 세계 4위의 원유 매장량과 세계 2위의 천연 가스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노후화된 정유·가스처리 설비와 전력 인프라의 현대화 수요가 이미 전쟁 이전부터 누적됨.
- 전쟁으로 인한 피해를 고려하면, 에너지 인프라 재건은 이란 경제 회복의 핵심 조건이자 최우선 재건 분야가 될 것임. 인접한 레바논의 경우 2022년 이후 극심한 전력난이 지속되어 왔으며, 초기 복구사업에서도 에너지 분야가 핵심 우선순위로 설정된 바 있음.
- 항만·물류 인프라 분야는 호르무즈 해협 위기의 직접적 결과로 우선순위가 크게 높아질 것임. 역내 국가들은 호르무즈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대체 물류 경로 확보와 항만 역량 강화에 적극 투자할 것으로 예상됨.
- 교통 인프라 분야는 레바논 초기 복구사업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재건 초기부터 우선 추진되는 분야임. 파괴된 도로, 교량, 터널의 복구와 함께 물류 효율화를 위한 간선 도로망 재정비, 국경 통과 인프라 정비 수요가 예상됨. 이란의 경우 제재 완화 또는 예외 허용이 가능하다면, 내륙 수송망을 통해 인접국(이라크 등)과 연결되는 교통 인프라의 역할을 고려할 때 지역 연결성 회복 차원에서의 수요도 기대할 수 있음.
- 도시·생활 인프라 분야로는 상하수도 시스템, 의료 시설, 교육 시설, 잔해 처리 인프라가 핵심 재건 수요로 대두 될 것임. 특히 상하수와 의료 인프라는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 국제사회의 초기 투자 우선순위에 항상 포함되는 분야임.

◎ 재건시장은 전쟁의 종결이나 완전한 평화 정착과 동시에 열리는 것이 아니라, 일련의 선행 조건들이 충족되는 과정에서 단계적으로 형성됨.

- 가장 먼저 요구되는 조건은 종전 또는 안정적 휴전의 성립임. 완전한 종전이 아니더라도 교전 강도가 현저히 낮아지고 민간 경제 활동이 재개될 수 있는 수준의 휴전 합의가 이루어지면, 재건 수요는 표면화되기 시작함. 이라크 전후 재건, 레바논 분쟁 이후 복구 사례 등에서 확인되듯, 실제 발주는 종전 선언 이전부터 긴급 복구 형태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음.
- 두 번째 조건은 제재 완화 또는 예외 허용임. 이란을 대상으로 한 미국의 ITSR(이란 거래 및 제재 규정) 등 대이란 제재는 현재 매우 포괄적인 범위에서 금융 거래, 수출입, 제3국 경유 거래까지 규제하고 있음. 따라서 이란 및 이란 인접국을 대상으로 하는 재건사업은 제재 체계의 변화 없이는 서방 금융기관과 보험사의 참여 자체가 불가능함. 제재 해제에 이르지 않더라도 인도적 지원이나 특정 인프라 복구에 한한 예외 허용 방식이 적용될 때를 대비해야 함.
- 세 번째 조건은 국제금융·공여체계의 가동임. 2025년 레바논 재건을 위한 세계은행의 2억 5천만 달러 복구 프로젝트 승인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세계은행(World Bank), 이슬람개발은행(IsDB) 등 다자개발은행(MDB)과 주요 공여국들이 재건 지원 프레임워크를 공식화하는 시점이 실제적인 시장 개방을 알리는 신호임.¹⁶⁾
- 네 번째 조건은 항행 및 항공 안전의 회복임. 호르무즈 해협 통항 안전 확보와 역내 주요 공항의 운항 정상화는 재건 현장에 기자재와 인력을 투입하기 위한 물리적 전제 조건임.

16) World Bank(2025), Lebanon Damage and Needs Assessment Report.

- ◎ 상술한 조건들의 충족 속도에 따라 재건시장은 세 가지 시나리오로 전개될 수 있어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 수립이 필요함.
- 시나리오 1(조기 외교 타결형)은 미-이란 협상이 비교적 빠르게 진전되어 2026년 하반기 내 휴전이 안정화되고, 2027년부터 국제 재건 지원체계가 가동되는 경우로, 긴급 복구사업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선점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임.
 - 시나리오 2(장기 교착형)는 산발적 충돌이 지속되며 전면적인 종전이 늦어지는 경우로, 2027~2028년 이후에야 본격적인 재건 수요가 가시화됨. 이 경우 GCC 역내의 사업(에너지 비축, 대체 물류망 등)이 중간 기회가 될 수 있음.
 - 시나리오 3(이란 정권 변동형)은 전쟁 혹은 내부 정치적 격변으로 이란의 통치 구조 자체가 변화하면서 국제사회의 재건 개입이 이라크 2003년 이후 수준으로 확대된다면 대규모의 재건 수요가 형성될 수 있음.
- ◎ 중동 분쟁 이후 재건시장은 과거의 단순 EPC 도급 시장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구조적 특성을 가짐.
- 첫째, 단계적 복구 및 재건 방식임. 재건은 일괄 발주 형태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긴급 복구(Emergency Recovery) → 초기 복구(Early Recovery) → 중장기 재건(Reconstruction)의 단계를 거쳐 순차적으로 전개됨. 단계마다 발주 주체, 자금조달 방식, 요구 역량이 달라지므로, 기업은 어느 단계에 어떤 형태로 진입할 것인지를 전략적으로 결정해야 함.
 - 둘째, 정부 주도의 통합 집행체계 하에서 추가 재원을 지속해서 흡수하는 구조임. 세계은행의 레바논 재건 사례에서 보듯이, 재건사업은 단일 프로젝트가 아니라 다수의 공여국·기관이 자금을 투입하고 현지 정부가 집행 주체가 되는 복합 구조임. 이 과정에서 공여국의 정치적 이해관계, 현지 정부의 거버넌스 역량, 국제기구의 조달 규정이 동시에 작동하기 때문에 사업 구조가 복잡할 수밖에 없음. 특히, 특정 공여국의 자금이 활용될 경우 해당 국가 기업에 유리한 조달 조건이 설정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요인임.¹⁷⁾
 - 셋째, EPC 단독 수주 방식의 한계와 복합 사업모델의 부상임. 단순 건설도급 방식으로는 자원 조달 불확실성, 발주처 재정 취약성, 대금 회수 리스크 등을 감당하기 어려움. 따라서 공적개발원조(ODA), 다자개발은행(MDB) 자금을 사업 초기에 결합하고, 운영·유지관리(O&M) 계약까지 연계하는 사업모델이 경쟁력의 핵심이 될 수 있음. 이를 위해서는 금융 구조화, 리스크 배분 협상 역량, 현지 운영 파트너십 구축 역량이 중요한 경쟁력 요인임.
- ◎ 기업 차원의 준비 전략은 네트워크·정보·파트너십의 선제적 구축, 다자간개발은행 및 공여기관의 조달체계 숙지, 재건 특화사업 모델과 패키지 수주 역량 확보, 단계별 진입 전략 마련으로 구상할 수 있음.¹⁸⁾¹⁹⁾
- 네트워크, 정보, 파트너십의 선제적 축적이 재건시장 진입의 실질적 출발점임. 재건시장에서의 수주는 발주 공고

17) Council for Development and Reconstruction (CDR). (2025). Lebanon Emergency Assistance Project (P509428): Third Party Monitoring Agent (TPMA) Services—Terms of Reference (1040-LEAP-TOR-TPMA; CDR Procurement No. 1040; Ref. LEAP-CS-TPMA-01). Beirut: Council for Development and Reconstruction.

18) Jody-Anne Mills(2017), Rehabilitation Services in Disaster Response.

19) Anderlini, S. N., & El-Bushra, J. (2004). Post Conflict Reconstruction. In Inclusive Security, Sustainable Peace: A Toolkit for Advocacy and Action (pp. 51-68). International Alert & Women Waging Peace.

가 나고 나서 준비하면 이미 늦은 경우가 많음. 현지 파트너십을 이미 구축한 기업, 발주처 네트워크를 보유한 기업, 사업 정보를 선제적으로 확보한 기업이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됨. 따라서 현재의 전쟁 상황에서도 이란 인접국의 현지 파트너, 네트워크, 재건 관련 국제기구 채널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확장해야 함.

- 다자개발은행(MDB) 및 공여기관의 조달체계 속지는 재건시장 참여의 핵심 기술적 역량임. 세계은행(World Bank), 이슬람개발은행(IsDB) 등의 조달 규정은 일반 상업 발주와 다른 별도의 입찰 절차, 자격 심사 기준, 계약 조건, 보고 체계를 요구함. 세계은행의 표준조달문서(СПD), FIDIC 기반 계약 조건, 환경·사회 세이프가드 요건 등에 대한 내부 역량을 갖추어야 함.
- 재건 특화 사업모델과 패키지 수주 역량의 확보도 선행 과제임. 재건시장에서는 설계-조달-시공-운영을 통합적으로 제안할 수 있는 역량과 자원 조달 방안을 함께 제시하는 능력, 현지 고용 창출 등을 연계하는 역량이 차별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 또한, 재건 현장의 특성상 빠른 복구 속도, 현장 안전 확보, 품질관리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시공 기술 역량도 요구됨.
- 단계별 진입 전략을 통해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시장 내 입지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함. 1단계 긴급 복구 시기에는 도로·교량 응급 복구, 임시 전력 설비 설치, 긴급 수처리 시설 구축 등 소규모 사업을 통해 현지 발주처·국제기구와의 신뢰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우선임. 2단계 초기 복구 시기에는 상하수도 복원, 배전망 재건, 항만 운영 재개 등 규모가 커지는 패키지형 사업 참여를 확대해야 함. 3단계 중장기 재건 시기에는 에너지 인프라 현대화, 정유·가스처리 시설 재건, 신규 발전소 건설 등 EPC 기업의 핵심 경쟁력이 발휘될 수 있는 대형 사업에 참여해야 함.

◎ 정부 차원의 준비전략은 ODA·정책금융·민간투자 연계전략 수립, 외교적 기반 조성 및 제도적 지원, 재건시장 전담 플랫폼 구축으로 구상할 수 있음.

- ODA-정책금융-민간투자 연계 전략의 수립이 재건시장 참여를 위한 정부 지원의 핵심 방향이 되어야 함. 재건시장에서 시공 기술 기반의 기업 경쟁력은 한계가 있으며, 정책금융을 통한 세계은행 등 MDB 사업과 연계하여 패키지형 지원을 제공할 수 있을 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음.
- 또한, 제재 완화 또는 예외 허용 시점에 신속하게 금융 지원 체계를 가동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적 근거와 지원 프레임워크를 사전에 정비해 두어야 함. 자원 구조 측면에서는 단일 금융기관의 지원이 아니라 정책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컨소시엄형 금융 지원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외교적 기반 조성 및 제도적 진입 지원은 정부 역할의 또 다른 핵심 영역임. 재건사업 진입은 단순한 기업 간 계약이 아니라 발주국 정부, 국제기구, 공여국 간의 외교·정치적 맥락 속에서 이루어짐. 따라서 재건 관련 국제 논의 플랫폼에 참여하여 역할을 선제적으로 설정하고, G2G(정부 간) 채널을 통해 우리 기업의 참여 가능성을 외교적으로 뒷받침해야 함.
- 재건시장 전담 플랫폼 구축은 이러한 노력을 통합하고 지속성을 담보하는 제도적 기반임. 이 플랫폼은 단일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여기관 자금 조달-보증 및 보험-민간 기업 수행-준공 후 운영 및 유지관리까지 전 사이클을 연결하는 통합 지원 체계로 설계되어야 함. 구체적으로는 재건시장 정보 수집 및 배포 기능, 기업의 MDB 입찰 준비 지원 기능, 현지 파트너십 매칭 기능, 분쟁·클레임 대응 법률 자문 기능, 금융 구조화 지원 기능을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어야 함.

〈그림 4〉 재건시장 형성 조건과 대응 전략



- ◎ 재건시장은 단순히 전쟁이 끝난 후 열리는 시장이 아니라, 준비된 국가와 기업만이 진입할 수 있는 전략적 기회의 장임. 이번 분쟁이 해외건설시장에 가져온 단기적 충격—공사비 상승, 공기 지연, 금융비용 증가—은 부담이지만, 동시에 중동 전역의 인프라 수요가 구조적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함.
 - 기업 차원에서는 위기관리와 함께 재건시장 진입을 위한 네트워크·역량·사업모델을 축적하는 투자 기간으로 활용해야 함.
 - 정부 차원에서는 외교·금융·제도 지원이 기업의 시장 진입 시기에 맞춰 즉각 작동할 수 있도록 준비 체계를 선행적으로 정비해야 함.
 - 결국 현재의 불확실성을 어떻게 관리하느냐보다, 불확실성이 걷힌 이후의 시장에서 어떤 위치에 서 있느냐가 이번 사태가 우리 해외건설 산업에 던지는 핵심 질문임.

손태홍(건설기술·관리연구실장·thsohn@cerik.re.kr)
 성유경(연구위원·sungyk@cerik.re.kr)
 박희대(연구위원·hpark@cerik.re.kr)

CERIK

Global Knowledge Hub & Partner
Leading Beyond the Future

CERIK **하이라이트**는
건설 관련 정책·제도 동향을 제공하며 수시 발간됩니다. (비매품)
발행인: 이충재
<http://www.cerik.re.kr>